

구미지역경제

ISSUE FOCUS

Vol. 40 (2020. 06.)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1
02 국내외 경제이슈	6
03 국내외 정책이슈	16

[FOCUS]

01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6
----------------------	----

작성 : 오현주 선임연구원
(hjoh@geri.re.kr)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ICT 업계 합종연횡 활발

- 6월 3일,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가 주도하는 AI 원팀 (One Team)에 공동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 * AI 원팀 : 금년 2월 출범한 산학연 협의체로, KT주도 아래 현대중공업그룹한국과학기술원 (KAIST)·한양대학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5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
-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AI 원팀 참여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AI 역량 기반 사회적 이슈 해결 기여, △보유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AI 역량 강화, △제품·서비스·솔루션 분야의 AI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업성과 창출, △산학연을 연결하는 AI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협력할 방침
- LG유플러스와 KT의 5G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과 LG전자의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딥러닝 등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추진
- 아울러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데이터에 LG전자의 스마트가전 및 AI 기술력을 결합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할 예정
- SKT는 국내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AI 초협력을 제안하며 삼성전자카카오와의 협력 가속
 - SKT·삼성전자카카오 3사 사장단 급에서 AI 협력방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세부 협력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각자 서비스하는 AI 음성비서(아리아, 빅스비, 카카오)의 통합 작업 등을 추진
 - 이번 협력으로 SKT의 AI스피커 누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등 다양한 제품에 향상된 성능의 AI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서 '19.10월 카카오와 3천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SKT는 카카오 지분 2.5%를, 카카오는 SKT 지분 1.6%를 보유
- 네이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AI 연구벨트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AI 플랫폼 클로바를 개방하는 등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노력
 - 지난 수년간 세계 곳곳에 AI 거점을 마련하고 있으며 '17년에는 미국 제록스로부터 유럽의 주요 AI 연구소인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인수해 80여명의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
 - '18년에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AI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동남아 AI 강국인 베트남의 대학교들과도 공동연구를 진행 중
 - 이외에도 '16년에는 일본 자회사 라인의 라인데이터랩스를 설립했으며 100명 수준의 AI 개발 인력을 '21년까지 200명으로 증원시킬 계획



화웨이, 보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5G 장비 국제 보안 인증 획득

-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5G 기지국 장비에 대하여 스페인 정보국 산하 인증기관 CCN 으로부터 국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EAL4+ 보안 인증을 최종 획득
 - * CC EAL4+ 등급은 네트워크 장비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등급
- CC 인증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기준을 연동하고 상호 인증을 위해 통합제정된 공통 평가기술
- CC 인증의 평가보증등급(EAL, Evaluation Assurance Level)은 총 7개(1~7) 단계로 등급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안 안전성 검증도 까다로워 검증시간이 긴 것이 특징
- 이번 CC 인증을 획득한 화웨이 gNodeB 기지국 장비는 5G 구축에 쓰이는 메인 제품이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급
- 화웨이는 지난 2년간 5G 제품의 소스코드, 제품개발 과정의 설계, 아키텍처 평가 및 엄격한 제품 테스트를 거쳐 CC 인증을 발급받았으며 향후 5년간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의 실제 응용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인증서를 관리·갱신할 계획
- 이번 인증으로 화웨이 5G 기지국 장비의 보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5G 무선 접속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
- 향후 CC 인증 취득을 통해 입증된 보안 역량을 유지해가면서 한국과 전 세계에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
- 한편, 현재 화웨이는 CC, FIPS, PCI, ISO27001, ISO 27028, CSA 인증 등 270개 이상의 보안 인증서를 취득했으며 이 중 CC 인증만 50여개
-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 속 보안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 CC 인증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
-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어 주요 국가기업 기밀 정보를 중국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맹국에게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할 것을 요구
- 최근 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반(反)화웨이 전선에 합류하여 5G 구축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할 것을 지시(5.23)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반 화웨이 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
- 미국이 제기하는 보안 우려로 인해 5G에 대한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를 고민하는 글로벌 이동 통신사들에 대해서 이번 화웨이의 CC 인증으로 보안 우려라는 난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



中 '20년 양회(兩會) 개최, 핵심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약칭으로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 목표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안보 등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행사
 - * 중국정부의 성장률 목표와 시진핑 정부의 개혁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중요
- 매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3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5일 시작해 일반적으로 10~12일동안 진행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이상 연기되며 5월 21~28일 일정으로 축소
- 특히 5월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는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여부, 재정·통화·민생·개혁 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의 운영 방향과 계획 관련 이목 집중

< 전인대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GDP 경제 성장률	•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예측 어려움으로 목표 미설정 - 방역, 민생안정 및 고용, 기업지원 등 강조
재정정책	• 경기부양 재정 마련 위한 역대급 재정 - '10년 설정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GDP의 3.6% 이상
통화정책	• 완화기조 유지 -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준비율(RRR)·금리 인하 및 재대출 등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
민생강조	•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사오캉' 사회 실현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 경제성장보다 민생안정에 방점
개혁추진	• 시장활력 증대, 신성장동력 업그레이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추진 지속 - 인터넷+ 정책'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수익창출 *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신종 업종을 육성하는 전략
내수확대	• 소비진작,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양로·육아 서비스업 발전 지원, 관광거리 개선, 전자상거래, 택배업 지원 언급 - 14차 5개년 계획(21~25) 준비 - 新SOC(5G, 전기차·충전소, AI·빅데이터·산업인터넷)와 디지털 도시화, 지역일체화 추진으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
대외무역	• 개방 확대 기조 유지하되 산업망·공급망 안정 주력 - 개방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을 내수로 전환하는 등 방안에 중점

- 이번 양회 기간 중국 정부는 '25년까지 향후 6년간 5G·AI·산업인터넷 등 첨단 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약 1,700조원) 투입 계획을 구체화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조기 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화웨이 제재 강화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에 대응해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01

국내외
기술동향

美, 드론 배달 서비스 상용화 속도...장거리 드론 배달 첫 허용

- 연방항공청(FAA)은 실리콘밸리의 드론 배달 서비스 업체인 집라인(Zipline)이 드론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노벳 헬스 메디컬 센터에 의료용품 및 개인보호 장비를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
- FAA는 Part 107 규정에 따라 드론 조종사 시야를 벗어나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긴급 규제 면제를 승인
- 이번 규제 면제로 집라인은 최대 30마일 왕복 경로를 포함한 2개 노선을 운행
- 메디컬 드론 허브에서 지정한 지점에 낙하산으로 의료제품 상자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배달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
- 마스크, 호흡기 등 개인보호 장비도 드론을 통해 배송할 계획
- 이번 드론 배달 서비스를 통해 경증 환자들이 집이나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품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관련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부 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구글 드론 계열사 윙(Wing)도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작
- 윙은 '19.4월 업계 최초로 FAA로부터 무인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배송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여 비행 반경 4마일(6.4km)의 드론 배송 서비스 개시
- 2년간 유효한 한시적 서비스로 낮 시간대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운행을 불허
- 윙의 배송용 드론은 한 번에 최대 1.5kg 이내의 화물을 배송할 수 있으며 최대 120km/h의 속도로 10km의 범위에서 10분 안에 상품 배송이 가능
- 사용자가 윙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필요한 생필품 등을 주문하면 드론이 지정된 배송 장소의 앞마당이나 주차장, 공터 등의 상공에서 배송품이 담긴 종이백을 줄로 내려 전달 받는 방식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년 2~4월 사이 배송 서비스 수*가 5배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

* (호주) 캔버라, 브리즈번 로건시티, 퀸즐랜드, (미국) 버지니아, (핀란드) 헬싱키 등



獨 플라잉카 개발 스타트업 Liliium, 3,500만 달러 신규 투자유치

- 독일 플라잉카 개발 스타트업인 Liliium이 3,500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유치
- 특히 이번 투자는 2020년 3월 2억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은지 3개월 만에 추가 투자를 받은 것이며, Larry Page가 지원한 플라잉카 개발업체인 Kitty Hawk사가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중단하고 다수 직원을 해고한 것과는 상반되게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미
- Liliium은 2019년 10월 자사 5인승 플라잉 택시인 Liliium Jet(최대 속도 시속 100km)의 첫 번째 단계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
- 2025년 개발이 완료되면 Liliium Jet의 최대 속도는 시속 300km에 최대 300km 거리까지 비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
- 개발이 성공한다면 Liliium Jet는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를 1시간 30분 이내로 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평균 속도가 약 160km 정도인 KTX와 헬기를 활용한 이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당뇨 환자용 인슐린 투약 시스템 개발업체 Bigfoot

- 당뇨 환자용 인슐린 투약 및 관리 시스템 개발업체인 Bigfoot Biomedical이 5,500만 달러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
- Bigfoot은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업체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인슐린 투약 시스템과 투약을 도울 수 있는 관리 단말을 개발
- 현재 Bigfoot Unity Diabetes Management Program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당뇨 환자의 인슐린 주사 시기와 양을 권장하기 위해 Abbott사의 연속혈당 모니터링 패치인 FreeStyle Libre와 통합이 가능한 커넥티드 투약펜을 포함
- Bigfoot Biomedical은 해당 시스템을 구독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구독 패키지에는 인슐린, Abbott사의 연속혈당 모니터링 패치, 투약펜용 주사, 보조 혈당 측정기, 혈당 테스트 스트립 등이 포함되며, 연내 FDA 승인 신청 계획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2020년 6월 재정증권 7.0조원 발행 (*20.05.29.)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6월중 총 7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
-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으로,
 - * 단기 차입수단(재정증권 발행, 한은 일시차입) 중 하나로 연내 상환 필요
-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

구분	17차 발행	18차 발행	19차 발행	20차 발행
발행규모	2.0조원	2.0조원	1.5조원	1.5조원
발행종목	63일물	63일물	63일물	63일물
입찰일시	6.3(수), 13:40~14:00	6.10(수), 13:40~14:00	6.17(수), 13:40~14:00	6.24(수), 13:40~14:00
발행일	6.4(목)	6.11(목)	6.18(목)	6.25(목)
상환일	8.6(목)	8.13(목)	8.20(목)	8.27(목)

-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7조원)은 국고금의 세입-세출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부족자금 대응(3.5조원) 및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3.5조원)에 활용할 계획
- 6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3.5조원 증가한 14.5조원이 될 전망
 - * 금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30.0조원
- (참고) 재정증권 입찰 대상기관

구분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은행 (13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도이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9개 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NP파리바은행(PPD), ING서울지점(PPD), JP모간체이스은행(PPD) (10개 기관)	국민은행, 농협은행 (2개 기관)
비은행 (18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11개 기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PPD), SK증권(PPD) (12개 기관)	한국증권금융 (1개 기관)

* 밑줄은 재정증권 입찰 대상기관 중 중복된 경우를 표시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칠레, 한국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각료선언 참여 ('20.05.29.)

• 5월 29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칠레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 참여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도로 5월 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공동 각료선언문은 코로나 위기에도 필수적인 교역·인력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이번 WTO 일반이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

* (싱)찬 춘싱(Chan Chunsing) 통상산업부 장관, (캐)메리 응(Mary Ng) 국제무역부 장관, (호)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뉴)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무역수출진흥부 장관

• 우리 측은 5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이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로를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담고 있음을 소개하고,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여 작금의 위기극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WTO 체제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WTO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

< 공동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

- ①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원활화 등
- ②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 ③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

• 칠레측은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로서 공동 각료선언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참여하여 한국 등 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공식화

• 이번 WTO 일반이사회 의제화 및 칠레의 참여 발표로, 그간 우리측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역과 필수 인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복수국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다자협력으로 발전하게 됨

- 정부는 6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통상분야 협력을 구체화 및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양·다자적으로 지속해나갈 예정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과학기술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발표 ('20.06.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동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지역 R&D 및 인프라 사업, 6,7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연구개발특구, 61개 지역 출연(연)과 카이스트 등의 4대 과기원, 지역 소프트웨어 자원 등을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즉시실행과제와 장기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제로 구분되어 마련

• 우선 즉시실행과제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하여 총 229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하였고, 지역에 기 구축된 연구시설 등의 산업지원 이용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대상 10~100% 인하로 74.8억원 감면 효과(추정)

* 기술료 및 컨설팅(교육 포함) 444개 기업 25~100% 인하로 46.5억원 감면 효과(추정)

- 그리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소재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펀드(특구펀드 19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기업투자 기회도 확대하며, 국내외 유통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도 지원

◇ 중소기업 개발 제품중 혁신제품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혁신제품지정제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대상으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확대('20, 30개사 제품 등록 추진)

◇ 또한, 미국 아마존·키스타터, 중국 알리바바 등 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에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입점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도 밀착 지원할 계획

* ㈜에너캠프(연구소기업, 美 아마존 입점을 통해 매출 30억원 달성)

•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과제

①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주도의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고('20 신규, 34억원),

- 산재된 지역 R&D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이전·창업 등으로 완결되도록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R&D밸리) 조성, 강소특구 지정 확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② 지역 주도 R&D 확대를 위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해결 위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예타신청, 총 2,720억원(국비1:지방비1)),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R&D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참여 R&D* 확대와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R&D 바우처 신규사업 등을 기획할 예정

* SWICT 기술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 ('19) 3개→('20) 8개→('21) 11개 지역 확대

③ 출연(연) 지역 분원 및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기여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강화와 4대 과학기술원의 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 등도 마련하여 지역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

* 생산기술(연) 대경본부의 원천기술 바탕으로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육성(차세대 전기모터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원, '21))

④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센터,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등의 지역 과학기술 기반도 확충할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발표와 동시에 이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 릴레이 현장 소통의 첫 행보로써, 5일 대구지역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출연연 지역조직, DGIST, 대구시 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 동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대구시의 산업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DGIST 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과 대구경북 출연(연) 지역조직협의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대구시) 지역 과학·산업 분야 현주소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적 투자 및 환류체계 개선과 지역 주도·자율 R&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 관련 방안을 건의

◇ (DGIST) 지역 제조 산업 부흥을 위한 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을 구축·시행 예정이며, 이는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거점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기존 대구지역의 전통 제조산업에 AI, 로봇기술 연계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

◇ (대구경북 지역 출연(연))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고가 장비 활용 지원과 더불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출연(연)·병원 협력사례 등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20.06.10.)

- 정부는 6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
 - * <참석> (대면)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화상)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상의회장 등 총 71명
- 우리 수출은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3.6%)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19의 지속 확산으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하반기에도 단기 수출 회복이 녹록지 않을 전망*
 -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반기 → 하반기, 한은) :
(세계) Δ4.4 → Δ2.4 (美) Δ6.7 → Δ6.6 (日) Δ5.5 → Δ5.0 (韓) Δ0.5 → 0.1
-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코로나19 기업 애로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출위기에 대응하여 왔으며,
 - * 코로나19 기업 애로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무역금융 260.3조(+28.1조), 통관물류 등 애로해소
수출활력 제고 방안(4.8, 제4차 비경) : 유동성 36조+α, 화상상담 등 언택트 수출지원
- 코로나19의 팬데믹 확산, 미중 분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응하여 금번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
- 금번 대책은 지역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 17개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社, 무역협회)를 바탕으로 지역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 발굴

구분	기존	보강
주체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참여
방식	하향식 정책 수립	상향식 애로해소
대응	일률적 지원	맞춤형 대응

• 대책 주요내용

(1)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지원 강화

□ 정부는 수출 수요 회복 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해소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기업·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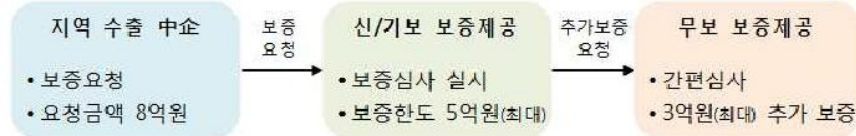
① 정책금융기관 공동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지원 프로그램 신설

*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대상 2,000억 규모 특별지원 신설
(무보 1,000억원, 신기보 각 500억원 → 수요·운영결과 등을 고려 확대 검토)

**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기업당 최대 8억원 : 신기보 5억 + 무보 3억)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



②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

*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총 7,171억원(무보 출연 3,271억원, 수은 출자 3,900억원)을 신속 투입

** 추경, 기금변경, 무역진흥자금 지원 등을 활용, 수출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 지원 확대 [무역진흥자금 긴급경영안정 추가 : ('20) 730억원 → 930억원(+200억원) 등]

③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특별 보증 신속 가동 등 산업별 지원

* (자동차) 완성차정부·지자체 출연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6.11 협약 체결)

(조선)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 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

(2)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3대 마케팅 보강

□ 정부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마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지원할 계획

① 대대적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3대 유망품목 시장 조기 확보

* (K-방역)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 집중 개최(6~7월),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 개최

** (K-홈코노미)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지원, 국내 대형 소비행사(코세페 등)와 연계,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6~9월) 및 해외 9개 소비대전(9월~) 순차 개최

*** (K-디지털)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확충, 콘텐츠 통번역 및 컨설팅 등 지원(30개社)

②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

*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

**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20.下) 등 활용

③ 표준·지재권·조달 등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 (표준) 코로나19 진단기업,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정

(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

(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20.下, 60개社 추가지원)

(조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3) 언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 정부는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 개최

*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바이코리아 등)을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 (섬유·패션, ICT, 세계일류상품 등 분야별 특화 온라인 전시관 신설 및 순차 확대)

** AR·VR 등을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 콘텐츠 제작 지원(1,750개社)

*** 인플루언서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K-실감 스튜디오, 해외 K-Studio 확대

② **사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 고도화**

* 국내외 화상상담 수출지원 인프라 획기적 확충(90개→1,600여개)

** 코트라 지원방식의 전면 온라인화, 수출활력촉진단 2020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재가동

*** 마케팅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지역 유망기업 중심으로 긴급 수출 바우처 확대(1,100개社)

③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용 언택트 수출** 활성화

*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9월)

** 환적물품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물품 반입 허용(6월)

(4)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 정부는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하여 수출확대 및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할 계획

① **범정부 드림팀**을 구성하여 전략 분야 집중 공략

*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하여, 기존 SOC 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 지원

② 친환경*(수소경제), 제조설비**(스마트공장·ICT) 등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강화**

* Future Car with Korean Innovation Webinar(獨, 하반기), GP 유럽 2020 등

** 한중동 신산업 파트너십 플라자(하반기), 한중 스마트팩토리 플라자 Pre-Week(11월), ICT Innovation Plaza(선전, 9월) 등 32개 사업 지원

(5)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 정부는 항공·해운 등 긴급 화물운송 지원, 물류부담 경감과 함께, 출입국 신속 통로 확산으로 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지원할 계획

①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의 기내 수송허용 등 **비상수송능력 확충**

② 범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경감**

* (물류비)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 지원

(통관)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 지원(7월~, 71억원)

(정보) 수출입 물류 포털 전면 개편, 물류정보 통합 제공(무역협회, 9월)

③ **韓中** 신속통로 모델 중심으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

* (출국)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국 내 쉼 지역과 타국가로 확대 추진

(입국)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단기체류(1주일 내)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6) 핵심어로 해소 및 생산기반 보호

□ 정부는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수출기업 경영 애로해소를 위해,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을 지원할 계획

①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등 추진

* 특별연장근로 보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추진, 지역투자보조촉진금 지원기업 대상 고용의무 탄력적용 등 지역 수요 기반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 패키지 지원

②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 유해 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시설검사 추진
[(현행)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설 가동(평균 6.4일 소요)]

**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관리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등 우선지원 추진('20. 529억, 3차 추경 : +116억)

③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 및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7) 수출 인프라 보강

□ 정부는 수출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고용·산업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전시 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계획

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 추진

* 지역별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수출 부진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수요를 받아 업종별 수출상황 등 모니터링

** 정부-지자체 매칭을 통해 무역금융·수출 마케팅·컨설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 실효성 제고

***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시,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선제적·정량적 지표로 연계·활용

②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시산업 정상화 추진

* 전시회 취소·연기로 인한 전시업계 피해 완화 및 애로해소 지원, 전시시설 사업자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별 의결로 한시적 감면 추진

** 방역관리입국 지원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패키지 지원

*** 전시산업 안정화를 위한 통계표준단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③ 취약한 전시 인프라 2배 확충

* 전국 11개 전시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3.6조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전시 면적을 약 2배 확충('19. 29.3만 → '26. 56.1만㎡)

** 초대형 수도권 전시시설의 경우 입지·전시 분야 등을 고려해 차별화

◇ 킨텍스 제3전시장 ('21~'23년, 4,891억원)

· 공항·항만 이용 용이 → '외곽형 전시장'으로 대형 산업재 중심의 세계적 전시장으로 육성



◇ 잠실 제2코엑스 ('22~'26년, 22,280억원)

· 도심 접근성 용이 → 소비재 전시, 컨퍼런스·스포츠·문화 이벤트 등 '도심형 복합공간'으로 조성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 ('20.06.12.)

-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1년 예산으로 2020년 대비 6.0% 증가한 542.9조원을 요구
-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3일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요구 규모

○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9조원으로, '20년도(512.3조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

* 최근 요구 수준(%) : ('17) 3.0 ('18) 6.0 ('19) 6.8 ('20) 6.2 ('21) 6.0

-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7조원 증액 요구

<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구분	2020년 예산(A)	2021년 요구(B)	증감(B-A)	%
총 지출	512.3	542.9	30.7	6.0
【 예산 】	351.1	364.8	13.7	3.9
【 기금 】	161.1	178.1	17.0	10.5

• 주요 요구내용

○ 주요 분야별로 보면,

- (산업·중기)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12.2% 증액 요구
- (R&D)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BIG3 분야 등을 위주로 9.4% 증액 요구
- (복지·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 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증액 요구
- (환경)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 요구
- (국방)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 요구
- (SOC)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 요구
- (농림·수산·식품) 스마트팜, 어촌뉴딜300 등 중심 0.6% 증액 요구

*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사업 재정비,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SOC는 그간 투자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교육)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시 0.8% 증액 요구

*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 포함시 △3.2% 감액 요구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3일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

- 또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

• 2021년 분야별 요구 현황

(조원)

구분	2020년 예산	2021년 요구
◆ 총 지출	512.3	542.9(6.0%)
1. 보건·복지·고용	180.5	198.0(9.7%)
2. 교육	72.6	70.3(△3.2%)
3. 문화·체육·관광	8.0	8.3(3.8%)
4. 환경	9.0	9.7(7.1%)
5. R&D	24.2	26.5(9.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6.6(12.2%)
7. SOC	23.2	24.4(4.9%)
8. 농림·수산·식품	21.5	21.7(0.6%)
9. 국방	50.2	53.2(6.0%)
10. 외교·통일	5.5	5.7(2.8%)
11. 공공질서 및 안전	20.8	22.1(6.1%)
12. 일반·지방행정	79.0	83.3(5.4%)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제품 등에 사용. 국내시장규모('13) 약 647억원(국산 비중 23%(148억원), 일본산 비중 73%(472억원))

** '15.8월부터 5년간('15.8.19~'20.8.18) 日 SMC社에 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 우리나라는 상기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19.9.10) 한 바 있으며, WTO 상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행을 완료

* WTO는 우리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덤핑 수입품의 물량효과, △국내 산업범위 설정, △통보 및 공고 절차 등과 관련된 분석절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 ①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②비밀번호 취급사유 및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 요약문 요구

• 이에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을 위해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 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

•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금일 관보에 게재

•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금번 이해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와 분쟁당사국(일본)에 통지한 것

•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15.8.19~'20.8.18) 부과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바, 5년의 기간이 만료 되는 금년 8월 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

< 분쟁 경과 >

- '15.01.20. 무역위, 일본산 밸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 * '14.02.21 조사개시 / '14.06.26 예비판정 / '14.10.23 공청회
- '15.08.19. 기재부,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15.08.19~'20.08.18)
- '16.03.15. 일본 정부, WTO 제소
- '16.04.28. 양자협의 진행
- '16.06.09. 일측, WTO 패널 설치 요청



**과기정통부, 오랜 숙원법안 국무회의(6.2) 의결 연구계산업계 혁신
가속화, 국민불편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분야 주요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
 - * 21개 법안 중 일부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즉시 공포시행

【 R&D 주요법안 】

- 먼저,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286개에 달함('19.10월 기준)
 -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 연구실에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의무화 등
 - ** (현행) 분교·분원 관리자 별도 지정 → (개정) 소규모(10인 미만) 분교·분원 관리자 통합 지정
 -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
 - * 현행 법령상 허가 등에 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됨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ICT 주요법안 】

-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촉진, 전문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2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
 - 해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
-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S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근거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 시책과 함께, 관련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며,
 -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을 통해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자서명법은 '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이외,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과,
 -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정보통신기술 혁신인재 양성으로 신기술신산업 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2개 대학ICT연구센터(ITRC) 및 5개 그랜드 ICT연구센터를 올해 신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힘
- 이번 17개 신규 센터 선정을 통해 올해 약 660명의 대학원생이 새롭게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미래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원사업은 ICT 유망 핵심기술 분야의 핵심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추진, 그간 15,000여명의 학생들이 배출된 사업으로,
- 올해는 산업적·정책적으로 고급인재 수요가 높은 유망 분야(AI, IoT 등)와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양자통신, 블록체인 등)를 중심으로 총 12개 센터를 선정

분야		선정대학	분야	선정대학
무선통신		한국과학기술원	빅데이터	한국과학기술원
양자센서		부산대	스마트미디어	고려대
인공 지능	학습지능	동국대	융복합콘텐츠	이화여대
	복합지능	경북대	시스템·암호보안	숭실대
블록체인		부산대	ICT융합(의료)	아주대
사물인터넷		한국과학기술원	ICT융합(스마트시티)	중앙대

- 올해부터 신규 선정된 센터에 대한 연구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기간이 기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고 연간 8억원 규모(1차년도인 '20년, 4억원)로 지원하게 되며, 혁신도약형 연구과제 신설, 학생 창의자율과제 확대(3→5개) 등을 통하여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 그랜드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규모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한 ICT 분야의 지역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 올해는 지능화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역량을 활용한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경기·인천, 충청, 호남, 동북, 동남 등 5대 권역별 각 1개씩, 총 5개 센터를 선정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동북권	동남권
선정대학	한국산업기술대	충북대	순천대	금오공대	동의대

- 선정된 센터는 최장 8년간 연간 20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산업과 연계된 재직자 석사학위과정 운영,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 등과 협력프로그램 수행 등을 통해 지역거점 연구센터의 역할을 맡게 됨
- 한편, 현재 재공모 중인 ITRC 2개 센터(콘텐츠, 지능형반도체 분야)는 선정평가를 거쳐 6월말 추가 선정될 예정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

- 정부는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 등을 논의
-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책임 하에 끝까지 개발하여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
-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해 옴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내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 국내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
-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원 이상 긴급지원
 - 또한, 방역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해외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 중장기 감염병 연구기반 강화 등도 추진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 ① **(치료제 분야)**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
 - 완치자 혈장을 채취·농축하여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혈장 채취 관련 제도 개선 및 완치자 혈장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비용 지원으로 올해 안 개발을 추진
 - * (혈장확보) 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안산시, 대구시 등에서 완치자 모집 중
 - 완치자 혈액 기반의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을 통해 동물실험(마우스, 영장류)을 지원하고, 하반기 임상시험 추진으로 2021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함
 - 약물재창출*도 나파모스타트 등 일부 약물에 대해 식약처 승인을 받아 국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음
 - *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는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를 확대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② **(백신 분야)** 합성항원 백신(1건) 및 DNA 백신(2건) 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을 2021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중점 지원

* (합성항원 백신)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합성하여 제조한 백신

** (DNA 백신) 병원체의 일부 항원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DNA에 삽입한 백신, 인체 접촉 후 세포 내에서 항원이 생산되어 면역반응을 유도

- 개발된 백신에 대한 국가비축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시 백신을 국내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시설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

③ **(국내·해외)** 국내 자체개발 지원과 동시에, 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

- 해외의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 및 국내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 필요한 경우 즉시 수입을 추진

- 특허권 만료 및 국내 확보 필요성이 높은 해외 치료제·백신의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기업의 직접 생산도 지원할 예정

④ **(안정화·국산화 지원)** 필수 방역물품 및 의료기기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11대 핵심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인공호흡기·에크모(ECMO) 등 중증환자 치료용 핵심의료기와 개인보호구를 선제적으로 확보·비축하고, 고글 등 국산 방역물품 기능개선도 지원

- 또한,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1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기술 수준 및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 경쟁력 확보를 위한 11대 전략 품목(안) >

(단기) '20~'22년	①인공호흡기, ②핵산추출기, ③진단키트, ④검체채취키트, ⑤이동형CT, ⑥연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⑦AI영상진단, ⑧자동홍부압박기
(중장기) '23년~	⑨ECMO, ⑩PCR장비, ⑪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인공콩팥)

⑤ **(연구기반 강화)**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개발 및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을 강화

-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20.下~'22)하여 감염병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 삼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 애로 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등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



완성차지자체정부,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협약 체결 (관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1일 완성차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협약식을 개최

<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0.6.11(목) 11:00~11:20, 한국자동차산업협회(지하 1층)
-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완성차)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카렘 카렘 한국GM 사장
(지자체) 경남·전북·부산·광주·대구·인천 부지사 및 부시장
(기관)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부품기업)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그간의 부품기업 금융지원 】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20.3~5월 간 P-CBO 프로그램으로 40여개 기업에 약 1,7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 외 대출 프로그램·만기 연장 등을 통하여 약 5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4,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의 유동성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부품기업, 해외 공장 생산차질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 부품기업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 】

-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완성차 업계는 5천억원 이상의 자동차 부품기업 금융 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였음
 - * 지난 5.28 경제중대본을 통하여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발표
- 완성차기업이 24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200억원)·지자체**(95억원)가 295억원을 출연하여,
 - * 완성차 240억원 특별출연(기보 140억원, 신보 100억원)
 - ** 정부 매칭 200억원 출연(기보 100억원, 신보 100억원) 예정이며, 지자체는 95억원 중 70억원을 기보에 출연, 25억원을 신보에 출연 예정
- 기술력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금일 협약식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4,2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 완성차 업계가 140억원, 정부가 100억원, 지자체가 약 70억원을 동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

-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중기부의 10번째 자성한기업(자발적상생협력기업)에 선정되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스타트업과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결을 위한 협력 등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 기보 상생보증 프로그램 】

- **(지원대상)** 완성차 업계, 지역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등이 추천하는 1~3차 협력 업체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1천명 이하의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 신용등급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력, 기술역량, 납품기업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

- **(지원규모)**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1/4~1/3 수준으로,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

-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운전 50억원, 우수기술기업은 운전 70억원 이내 지원 가능

- * 실제 보증지원 금액은 기존 보증 사용 현황(신보·기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접수)** 동 보증 프로그램은 6월 18일부터 전국 기술보증보험 영업점에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업들은 서류 등 제출 후 약 일주일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은행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타 지원)** 기술보증기금 자체적으로 보증료의 0.3%p를 감면하고, 신한은행·하나은행 영업점은 0.2%p의 보증료를 추가로 인하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금일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들은 수레바퀴 물에 빠진 물고기와 같이 학철부어(涸轍鮒魚)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당장의 물 한 사발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망을 구축하여 기술력과 납품 역량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특별보증 협약이 정부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성한기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과 상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

- 또한, 앞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하반기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최종(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년 하반기 강소특구 지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
 - 7개 시·도(광역시)의 지정 요청서* 접수 이후 8개월의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
 - *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군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경남(양산)
 -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작년 8월 6개의 강소특구가 첫 지정
 -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소특구 지정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특화분야 적합성(R&D역량, 성장 가능성), 배후공간(공간계획, 창업보육 지원) 타당성 및 강소특구별 육성계획 검토를 진행
- 지역별 강소특구 최종(안) 주요 내용
 - ① 울산 울주 [기술핵심기관: UNIST(1.02km²), 배후공간: 반천일반산단 등(1.96km²)]
 - 미래형 전지를 특화분야로 대기업과 민간투자 플랫폼 연계를 통한 C-Innostry (Cell-Innovation Industry) 클러스터 조성
 - ② 충남 천안·아산 [기술핵심기관: KATECH(0.25km²), 배후공간: 풍세일반산단 등(1.08km²)]
 - 국내 유일 자동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특화된 기술과 사업화 노하우를 이용한 차세대 자동차부품 혁신클러스터 구축
 - ③ 전북 군산 [기술핵심기관: 군산대학교(0.87km²), 배후공간: 새만금산단 등(1.83km²)]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사업화와 새만금산단 등 우수한 배후 여건을 활용한 산업구조 다변화 및 군산의 제2의 도약
 - ④ 경북 구미 [기술핵심기관: 금오공대(0.66km²), 배후공간: 구미하이테크밸리 등(1.80km²)]
 - 국내 최대 전자·전기 ICT 중소기업 집적지를 스마트제조 시스템 분야 테스트 베드 조성 및 구미궤 상생(대·중소·공공기관 등) 모델 창출
 - ⑤ 서울 홍릉 [기술핵심기관: KIST·고려대경희대(1.32km²), 배후공간: 서울바이오허브 등(0.06km²)]
 - 홍릉 일대의 우수한 R&D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메디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⑥ 전남 나주 [기술핵심기관: 한국전력공사(0.25km²), 배후공간: 나주혁신산단 등(1.25km²)]
 - 대표 에너지 공기업과 나주 에너지밸리(혁신도시)를 결합한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저장 중심의 국내 최초 공기업 주도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01.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I. 기본 방향

□ 추경 목적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 3차 추경은 ①세입경정 + ②금융패키지 지원 + ③고용대책뒷받침 + ④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계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
 -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제5차 비경)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고용충격 안정 특별대책(제5차 비경, 10조원)을 차질없이 지원
 -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

□ 추경 규모 : 35.3조원

○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 * '20년 1차 추경(11.7조원) + 2차 추경(12.2조원) : 23.9조원 旣 편성
- * 과거 경제위기시 추경 규모 : ('98) 13.9조원(세출 6.7 + 세입 △7.2)
('09) 28.4조원(세출 17.2 + 세입 △11.2)

□ 재원 조달 :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 국채발행 등

- ① 지출구조조정 : 10.1조원
- ② 기금 자체재원 활용 : 1.4조원
- ③ 국채발행 : 23.8조원

II. 추경안 규모

규모	총 35.3조원	
	※ 3차 추경까지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약 270조원 수준 (250조원 + 3차 추경 35.3조원, 중복 약 14조원 제외)	
투자 내용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
①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②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② 경기보강 패키지	11.3	
①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②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5.1	
③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11.4조원 감소(482.2→470.7조원)
- (총지출) 2차 추경 대비 16.0조원 증가(531.1→547.1조원)

□ 재정수지 △5.8%, '20년 국가채무 순증 99.4조원

- (통합재정수지) △27.4조원, GDP대비 △1.5%p(△2.5→△4.0%)
 - (관리재정수지) △22.7조원, GDP대비 △1.3%p(△4.5→△5.8%)
- (국가채무) +21.2조원, GDP대비 +2.2%p(41.4→43.5%)

(조원, %)

	'19년 본예산 (A)	'20년				2차대비 (C-B)
		본예산	추경			
			1차	2차(B)	3차(C)	
◇ 총수입 (증가율)	476.1 (6.5)	481.8 (1.2)	481.6 (1.2)	482.2 (1.3)	470.7 (△1.1)	△11.4
◇ 총지출 (증가율)	469.6 (9.5)	512.3 (9.1)	523.1 (11.4)	531.1 (13.1)	547.1 (16.5)	+16.0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6.5 (0.3)	△30.5 (△1.5)	△41.5 (△2.1)	△48.9 (△2.5)	△76.4 (△4.0)	△27.4 (△1.5%p)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7.6 (△1.9)	△71.5 (△3.5)	△82.0 (△4.1)	△89.4 (△4.5)	△112.2 (△5.8)	△22.7 (△1.3%p)
▪ 국가채무 (GDP대비,%)	740.8 (37.1)	805.2 (39.8)	815.5 (41.2)	819.0 (41.4)	840.2 (43.5)	21.2 (2.2%p)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9.4	

Ⅲ. 추경안 주요 내용

1. 세출확대 : 23.9조원

1-1.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 5.0조원(공급규모 135조원+α*)

* 한은·금융권에서 재정 지원없이 자체 공급하는 규모 등 53.0조원 포함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 1.9조원(공급규모 40.0조원)

-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확대
 - (융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10조원 지원(신보, 0.46조원)
 - (보증)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소액자금 0.9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액보증 재원도 지원(신기보, 0.07조원)
- (중소·중견기업) 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FOCUS

- (용자) 중소·중견기업(필요시 대기업 포함)에 대해 23.7조원(산은5, 기은10, 수은8.7) 정책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0.97조원)
- (보증)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4조원 공급 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0.43조원)

1-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9.4조원

①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 : 8.9조원

- ◇ 총 10조원 규모 지원방안 발표(4.22, 5차비경) → 단계적 재원조치 중
 - 먼저 시급한 소요 1.5조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기초치(5월) + 잔여소요 8.5조원 등은 3차 추경에 재원 반영
 - * 고용유지지원금 0.3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9조원 등

- (고용유지)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58만명, +0.9조원), 휴업수당 용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 지원(0.1조원)
- (생활안정) 특고·자영업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업훈련 생계비(+2만명), 생활안정자금(+2만명) 지원(118만명, 0.8조원)
- (직접일자리)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α 긴급 일자리 공급(55만명, 3.6조원)

②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0.5조원

- (서민금융)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1,100억원 추가 공급(+175억원)
- (주거안정) 다자녀 가구대상 매입임대 유형 신설(500호)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호 추가 공급(+2,185억원)

1-3. 경기보강 패키지 : 11.3조원

①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3.7조원

【 투자 활성화 】

- (U턴기업)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200억원)

① 지원대상 확대 : 첨단산업, R&D센터의 수도권 입지시 보조금 지급(시행령 개정사항)

② 국비지원 한도상향 : (현행) 100억원 → (개선)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

- (외국인 투자) 해외 첨단기업 국내 유치에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30억원)

① 현금지원 한도 : (현행) 일반·첨단기업 30%, R&D센터 40% → (개선) 일반 30%, 첨단 40%, R&D센터 50%

② 국비 보조율 : (현행)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개선) 첨단산업, R&D센터는 10%p 상향

- (혁신조달)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외 R&D 부처(중기부, 과기부 등)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200억원)



FOCUS

【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역소비 촉진)**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6→9조원)하고 금년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을 적용(3,177억원)
- **(산단지원)** 신규로 선정된 5개 산단 대개조 지역*에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 조기 착수(50억원)
 - * 경북(구미), 광주(광주 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 디지털 통합관제센터(2개소, 60억원) 및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을 조기 구축(3개소, 30억원)

【 수출회복 지원 】

- **(무역금융 확충)** 해외 프로젝트 수주,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한 質保 출연(3,271억원)
- **(비대면 수출 지원)** 국가간 이동제약을 고려,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등 확대(+445억원, 1,423→1,868억원)
- **(물류비 지원)**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애로를 겪는 중소수출기업에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및 국제물류비용 지원 확대(113억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 6.9조원 확대(+469억원)
- **(재기지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 지원 확대
- **(마케팅 지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신설 등 온라인 판로 지원(95억원)

【 중·소상공인 스마트 제조혁신 】

- **(스마트공장)** 공정 모니터링·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Lv4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II 단계 신설(20개사, 80억원)
 - * 지원단가 : (구축) 1억원, (고도화I) 1.5억원 → (고도화II) 4억원
- **(스마트 소상공인)** IoT, AR·VR 등 新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 주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 (스마트상점) 1,054 → 6,454개(+84억원), (스마트공방) 20 → 80개(+30억원)
 - (스마트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억원 공급

② 한국판 뉴딜(25개 과제) : 5.1조원

- ◇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3조원 수준 투자 → 일자리 55만개 창출
 - * '25년까지 중기 소요를 감안하면 76조원 수준의 재정소요 전망
 - ①일자리 효과, ②민간투자 등 파급효과, ③조기성과 창출가능성을 기준으로 25개 과제 선별
 - ⇒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하여 7월중 종합계획 확정·발표
- ◇ 금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총 5.1조원 투자
 - ①디지털 2.7조원 + ②그린 1.4조원 + ③고용안전망 강화 1.0조원

< 한국판 뉴딜 추경안 전체 모습 >

◇ 디지털 뉴딜 +2.7조원		◇ 그린뉴딜 +1.4조원	
1. D.NA 생태계 강화 +1.3조원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0.37조원	
1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0.56조원	1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0.32조원
2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0.05조원	1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0.01조원
3 1·2·3차 산업 5G·AI 융합 확산	+0.66조원	1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0.04조원
4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0.04조원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14조원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0.48조원	
5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공시설WiFi 구축	+0.11조원	1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0.45조원
6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0.03조원	1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0.04조원
3. 비대면 산업 육성 +0.75조원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0.58조원	
7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25조원	1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0.06조원
8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06조원	1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0.39조원
9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0.12조원	1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0.13조원
10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0.31조원		
4. SOC 디지털화 +0.48조원			
1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0.44조원		
1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0.03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0조원			
1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1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11조원
2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0.58조원	2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	+0.24조원
3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0.07조원		



FOCUS

【 디지털뉴딜 : ①D.N.A. 생태계 강화 】

-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14만개) 순차 개방(+1,680억원)
- 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21년까지 15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추경 5개, 신규 100억원)
- ③ 1·2·3차 숲 산업 5G·AI 융합 확산
 - AI 확산을 위한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신규 211억원)
- ④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산업별 전문가의 AI·활용 역량교육 등 융합인재 6천명 양성(추경 1,800명, 신규 36억원)

【 디지털뉴딜 : ②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 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 '21년까지 인터넷 미설치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추경 650곳, +31억원)
- ⑥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22년까지 중소기업 2,500개(추경 +300개) 대상 보안 컨설팅 지원 및 철도·항공 등 150종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점검(+108억원)

【 디지털뉴딜 : ③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

- ⑦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WiFi망 구축(신규 1,481억원)
- ⑧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352억원)
- ⑨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1년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추경 500개소, 신규 500억원)
- ⑩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 전국 곳곳에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신규 234억원)
* 지식산업센터(1,097개), 창업보육센터(260개), 테크노파크(19개) 등 1,562개소

【 디지털뉴딜 : ④SOC 디지털화 】

- ⑪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22년)
 - (교통)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550억원) 완료, 모든 철로에 전기 설비 IoT 센서 설치 등(+1,733억원)
- ⑫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 (산단) 전체 스마트산단을 대상으로 5G-IoT, 지능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추경 2개소, 신규 60억원)



【 그린뉴딜 : ①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

-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 '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15~30년)에 그린리모델링 완료(신규 2,352억원)
-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 '23년까지 산업단지주요 도로주변 등에 도시숲 200개 조성(+43억원)
- 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23년까지 광역·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신규 156억원)

【 그린뉴딜 : ②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 ④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 양성(+94억원, 392명), 미래녹색산업육성용자 1조원 공급(신규 2,000억원)
- ⑤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 스마트산단(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시범 구축(신규 210억원)

【 그린뉴딜 : ③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 ⑥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 태양광·해상풍력·LNG발전소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12개소) 개발을 위한 R&D실증 프로젝트 추진(신규 185억원)
- ⑦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산단주택건물·농촌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3,000억원)
- ⑧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 '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전기차 7.7만대, LPG차 4.5만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LPG) 총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지원(+990억원)

【 고용안전망 강화 】

- ① 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20.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21~'22, 0.1조원)
-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 114만명에 생활안정자금 지원('20추경, 0.6조원)
- ③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 신기술 분야,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20추경~'22, 0.6조원)
- 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제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재택원격근무 도입 지원 등('20추경~'22, 0.4조원)
- ⑤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 청장년층 대상 신사업 분야의 재취업 및 맞춤형 창업지원 등('20추경~'22, 0.5조원)